

## 일본은행, 성장분야 지원확대 발표

일본은행은 디플레 탈출을 위해 성장분야에 투자하는 민간금융기관의 대출규모 확대와 연장을 결정.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전략의 조기 효과를 기대하면서 디플레를 극복하려는 전략

### □ 일본은행에 의한 성장분야 지원

- 일본은행은 13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금융권의 대출 규모를 현재 3조5,000억엔에서 2조엔 증액된 총5조5,000억엔으로 확대
- 성장 동력 산업인 △환경, △에너지, △의료 등 18개 성장분야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의 대출한도를 늘려 미래 산업을 육성하려는 목적

#### 〈일본은행이 선정한 18개 성장 분야〉

1. 연구개발	10. 고령자사업
2. 起業	11. 콘텐츠사업
3. 사업재편	12. 관광사업
4. 아시아지역의 투자 및 사업전개	13. 지역재생 및 도시재생사업
5. 대학,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연구	14. 농림수산사업, 농상공연계사업
6. 사회 인프라정비·고도화	15. 주택지원사업
7. 환경·에너지사업	16. 방재대책사업
8. 자원확보·개발사업	17. 고용지원 및 인재육성사업
9. 의료, 간병, 건강관련사업	18. 보육·육아사업

\* 성장기반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18개분야 외에도 예외로 인정

- 일본은행은 개별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융자대상 기업선정은 금융기관이 담당

- 일본은행이 주도하여 민간금융기관의 성장분야에 대한 융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는 의도
- \*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는 “디플레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다” 라고 언급하면서, 금융 완화와 성장 산업에 집중적인 지원 계획을 발표
- \* 일본은행의 이번 조치는 성장 분야의 융자 확대를 통해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금공급메커니즘으로 연 0.1% 저리 융자로 환경·에너지·의료 분야의 대출 규모를 3조엔에서 3.5조엔으로 증액한 것이 특징
- \* 외상매출이나 재고를 담보로 융자해 주는 부동산·채권담보대출(ABL)한도는 5000억엔 규모로 2년간 연장 조치

### 〈일본은행의 성장·부흥지원 융자제도〉

구 분	성장분야지원 대출제도		중소기업 지원	달러 대출 지원
	성장분야 대출	ABL대출		
도입 시기	‘10년 6월	‘11년 6월	‘12년 3월	‘12년 3월
대출 규모	3조엔↔3.5조엔	5천억엔	5천억엔	1조엔 상당 달러
대출 금액	1000만엔 이상	100만엔 이상	100~1000만엔	미정
대출 기간	최장 4년	최장 4년	최장 4년	최장 4년
적용 금리	연 0.1%	연 0.1%	연 0.1%	시장 금리
‘12년3월 현재 대출 총액	2조9,998억엔	891억엔	-	-

(자료) 일본은행

## □ 일본금융기관의 지원 사례

- ‘10년 6월, 일본은행이 발표한 ‘성장분야 자금지원정책’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성장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

- 도쿄미쓰비시UFJ은행은 「성장기반강화 융자프로그램」과 「BTMU 성장전략서포트」 등을 설정하였으며, 미쓰이스미토모은행도 환경, 에너지분야의 중국시장을 겨냥한 펀드 설정 등 융자제도가 확대
- \* 지방은행들도 LED사업, 자동차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을 강화
- 일본은행은 과거 3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게 융자를 실시하였는데 융자총액은 2조9998억엔으로 집계
- 제1차로 4,625억엔(45은행), 제2차로 9983억엔(106은행), 제3차로 7,221억엔(122은행)을 융자하는 등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됨
- \* 일본은행의 성장산업의 지원 효과에 대해, TDB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0%가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
- \* 일부 기업은 “역시 담보나 실적이 없으면 융자가 어렵다”, “민간은행은 담보만 챙기지, 기술력이나 미래 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 성장분야의 융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

## □ 시사점

-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은행의 성장산업 융자확대 결정으로 ‘디플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성장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것은 성공하였으나, 일본정부의 재생전략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본은행의 정책에만 의존하는 구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
- \* 일본정부는 ‘11년 12월, “일본재생 기본전략”을 발표하였으나, ‘20년도까지 3%의 명목성장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현될 가능성은 불투명
- 일본은행은 환경·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융자실적이 많아, 일본

은행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우리기업들이 해외 인프라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금융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 특히, 일본의 지방은행들은 여유 자금이 풍부하여 일본정부도 지방은행의 여유자금  
활용방안을 찾고 있으므로, 우리정부나 국책은행의 보증제도 등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 <참고자료>

日本經濟新聞(2012.3.14). 「日銀政策決定会合 成長支援へ苦心の一手」

日本銀行(2012.3.14). 「当面の金融政策運営および成長基盤強化支援の拡充について」